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0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사무를 말하며, 이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답] ②

[해설]

- ② 틀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통치권이 아니라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02.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승진>

- ① 안택결 총경은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 재직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였다.
- ② 이준규 총경은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 받아 후배 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 ③ 문형순 경감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를 강조하였다.
- ④ 백범 김구 선생은 1919년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 후 임시정부 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하였다.

[정답] ④

[해설]

- ① 틀림. 문형순 경감 -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
- ② 틀림. 안택결 총경 -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 받아 후배 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
- ③ 틀림. 안병하 치안감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를 강조
- ④ 옳음.

▣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p>백범 김구 선생 (민족의 사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다. 경무국장 취임 후 임시정부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 하였다. 1932년에는 직접 대한교민단 의경대장(32.1.11.~32.2)에 취임하여 일제의 밀정 색출, 친일파 처단 및 상해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등 임무를 수행 하였다.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 전역을 이동하는 고난의 시기를 겪었으며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광복 후 귀국한 김구 선생은 1947년 경무부 교육국에서 출간한 「민주경찰」 창간호에 '자주독립과 민주경찰'이라는 축사를 기고하였고 국립경찰 창설기념 특호에서는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라는 휘호를 선물하는 등 경찰에 개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p>안택결 총경 (독립운동가출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운동가 출신의 여성경찰관이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서,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20일간 구금되었다.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혐의로 5개월간 구금되었으며, 1937년 일제가 조작한 수양동우회사건으로 수배된 후 만삭의 몸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946년 5월 미군정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어 국립경찰에 투신하였고 1952년부터 2년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풍속·소년·여성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권위적인 사회속에서 여자경찰제도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였다.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받아 후배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2018년 독립유공자 등록(건국포장 수훈)되었다.
<p>문형순 경감 (민주·인권 경찰의 표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형순 서장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독립군 출신으로 광복 이후 경찰간부(경위)로 경력채용되어 경찰에 입직하였다. 제주 4·3사건 당시인 1948년 12월, 제주 대정을 하모리에서 검거된 좌익총책의 명단에 연루된 100여명의 주민들이 처형위기에 처하자 당시 모슬포시장 문형순은 조남수 목사의 선처 청원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자수토록 하고, 1949년 초에 자신의 결정으로 전원 훈방하였다.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고 278명 방면하였다.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
<p>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호국경찰의 표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중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경찰관 최규식(태극무공훈장)·정종수(화랑무공훈장)의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임.
<p>차일혁 경무관 (호국·인권·문화 경찰의 표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18전투경찰대대장(경감)으로 경찰 투신하였다. 빨치산 토벌 당시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이현상을 '적장의 예'로써 화장해주고, 생포한 공비들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으로 귀순을 유도한 인본경찰·인권경찰의 표상이 되었다.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사찰의 문짝만 태우므로써 화염사(구례), 천은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쌍계사(하통), 금산사(김제)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고 충주경찰서장 재직당시 '충주직업소년학원'을 설립하여 불우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경찰의 표본이 됨. 화염사 공적비 건립(1998), 보관문화훈장 수훈(2008),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 선정(2008, 문화재청),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주인공 장하림(박상원역) 실제모델(1991, MBC) 등으로 업적을 인정 받았다. 2019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
<p>안병하 치안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2년 경찰에 투신하였고, 1979년 2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임명되었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권'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권

<p>(민주·인권 경찰의 표상)</p>	<p>②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를 강조 하였다.</p> <p>③ 신군부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하고 동봉고 분실로 끌려가 10여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휴유증으로 투병하다 사망하였다.</p> <p>④ 2006년 순직경찰로 인정받아 서울 국립현충원에 영면하게 되었다.</p> <p>⑤ 2009년 문을 연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경찰인재개발원)에는 안병하 치안감의 이름을 딴 안병하 홀이 생겼다.</p> <p>⑥ 2017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p>
<p>이준규 총경 (민주·인권 경찰의 표상)</p>	<p>① 이준규 서장은 1948. 3. 31. 경찰입직(순경공채)하였고, 1980년 5·18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 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고 자체 방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소량의 총기마저 격발할 수 없도록 방아쇠 뭉치를 모두 제거해 경찰관들과 함께 고하도 섬으로 이동시키는 등 원천적으로 시민들과의 유혈충돌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광주와 달리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p> <p>② 이를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어 1980년 직위해제된 후 파면되는 한편, 강경진압지시 거부 및 자위권 소홀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p> <p>③ 2018년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9년에는 형사판결 재심 무죄 선고 및 파면처분 직권 취소 등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p>
<p>최중락 총경 (대한민국 수사경찰의 표상)</p>	<p>① 최중락 총경은 1950.11월 경찰에 입직(순경공채). '63·'68·'69년 치안국 포도왕(검거왕)으로 선정되었고 재직 중 1,300여 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경찰의 상징적인 존재이다.</p> <p>② 1970~80년대 MBC드라마 '수사반장'의 실제모델로 20년간 각종 자료 제공 및 자문을 하였고, 1990년 퇴직 직후에는 '축탁수사연구관'으로 선임되어 후배 수사 경찰관들을 지도하였다.</p> <p>③ 녹조근정훈장·근정포장·대통령표창을 비롯 120여개의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p> <p>④ 2019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p>

0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 ② 법규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 ③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두13132)
- ② 옳음.
- ③ 옳음.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④ 틀림. 위임명령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내용을 보충·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법규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0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승진>

- ① 행정안전부장은 위원 임명을 동의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경찰, 검찰, 법관,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④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이 정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틀림. 행정안전부장은 위원 임명을 **제정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②)
- ② 옳음.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③)
- ③ 틀림. **법관**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⑤ 제3호)
- ④ 틀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11조)

0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③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 ② 틀림.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①)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 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②)
- ③ 옳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③)
- ④ 옳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②)

06.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직위해제는 휴직과 달리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의 해제이다.
- ②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대기명령 기간 중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 ③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등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 ④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직위해제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 직위해제 후 징계 또는 징계 후 직위해제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 ② 옳음.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8조 ①)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8조 ②)
- ③ 옳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②) 아래 표 참고.
- ④ 틀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 검색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불산입의 예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5조)	<p>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 제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에 포함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p> <p>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중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p> <p>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형사사건기소)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p>
-------------------------	--

07.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등은 ①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등은 ②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임용권자등은 ②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 ② 틀림.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①)
- ③ 옳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③)
- ④ 옳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① 제1호)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 검색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08.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② ①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 ④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5년간, 그 밖의 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공직자윤리법 제15조 ①)
- ② 옳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①)
- ③ 옳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①)
- ④ 틀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①)

09.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승진>

- ①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따른 경찰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이나 주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 ②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다.
- ③ 집행벌은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되며,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 있고, 의무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격리는 모두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③

[해설]

- ① 틀림. 강제집행은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중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는 직접적 의무 이행확보 수단**에 해당하고 집행벌은 간접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옳지 않은 지문이다. ▶ 아래 표1 참고
- ② 틀림. 강제징수는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 아래 표2 참고.
- ③ 옳음.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금전벌로서 장래에 향한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며 경찰벌과 병과 할 수 있고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부과도 가능함은 물론 일시부재리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 ④ 틀림.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는 강제집행의 수단 중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격리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분류_표1

직접적 이행확보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상 즉시강제
간접적 이행확보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벌 •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과징금, 가산금, 관허사업의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집행(집행벌)

■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_표2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집행 : 대집행,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 즉시강제
	경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형벌 • 경찰질서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상 제재(과징금·가산금) • 명단공개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 취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거부 • 관허사업의 제한 • 국외여행의 제한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②

[해설]

- ① 틀림. 자살기도자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사여부 관계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①)
- ②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③⑦)
- ③ 틀림.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요청을 거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④ 틀림.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 일시 보호하여 구호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경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재량권 0으로의 수축과 같은 재량행위의 기속화에 따라 하나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경찰관은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은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② 옳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③ 옳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④)
- ④ 옳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②)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 검색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13.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조직편성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승진>

- ① 조정과 통합의 원리 ② 명령통일의 원리
- ③ 계층제의 원리 ④ 통솔범위의 원리

[정답] ①

[해설]

- ① 옳음. 아래 표 참고

■ 조정과 통합의 원리

조정과 통합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는 경우 : 업무처리과정을 통합한다든지 연결하는 장치나 대화채널을 확보㉡ 부서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 : 더 높은 상위목표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도록 함㉢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 : 가능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자가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줄 것②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갈등을 완화시키거나, 양자간의 타협을 도출하거나,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
---------------	--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민원인이 경찰관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폭력단체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청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제4호) **폭력단체 현황은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련된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
- ②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 ③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②)
- ④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③/ 제21조①)

15.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하나,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 ②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경찰 감찰 규칙 제12조)
- ② 옳음. (경찰 감찰 규칙 제15조 ①)
- ③ 틀림.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찰 감찰 규칙 제12조)
- ④ 옳음. (경찰 감찰 규칙 제7조②)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16. 「경찰 인권보호규칙」(경찰청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 ④ 조사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경찰인권보호규칙 제24조)
- ② 틀림.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경찰인권보호규칙 제18조 ①)
- ③ 옳음. (경찰인권보호규칙 제34조)
- ④ 옳음. (경찰인권보호규칙 제32조 ④)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경찰서장이 소속경찰서 경무계 직원들에게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회식비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A경위가 휴일날 인근 대형마트 행사에서 추첨권에 당첨되어 수령한 수입차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공직자등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제1호)
- ② 옳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제7호)
- ③ 옳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제4호)
- ④ 틀림.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18. 경찰과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승진>

- ① 1945년 국립경찰의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봉사와 질서'이다.
- ② 경찰현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근면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의 문제'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틀림. 1945년 국립경찰의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정신인 '봉사와 질서'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② 틀림. 경찰현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아래 표1 참고
- ③ 옳음.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의2)
- ④ 틀림.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비진정성의 조장'에 대한 설명이다. ▶ '냉소주의의 문제'는 상의하달 방식의 강령으로 인한 냉소주의 문제를 의미한다. 아래 표2 참고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경찰헌장(표1)

경찰 헌장	① 우리는 정의 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② 우리는 국민의 신뢰 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 을 집행하는 공정 한 경찰이다. ③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 을 갖고 뉘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 한 경찰이다. ④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 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 하게 봉사 하는 친절 한 경찰이다. ⑤ 우리는 화합 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 을 지키며 검소 하게 생활하는 깨끗 한 경찰이다.
----------	--

■ 윤리강령의 문제점(표2)

실행가능성의 문제 (강제력의 부족)	①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시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 ② 지나친 이상 추구의 성격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낮다.
냉소주의 문제	경찰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 하고 하달 되기 때문에 비자발성으로 인한 냉소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 제정과정에서의 과도한 참여와 논란야기(x)
최소주의의 위험	최선을 다해 근무 하려고 하다가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를 일으킨다.
비진정성의 주장	경찰강령은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우선순위 미결정	강령 간, 업무 간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행위중심적 성격	경찰강령은 행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한다.

19.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론 중 '사회과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1'승진>

- ①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범죄에 접촉·동조하면서 학습한다.
- ②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고,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주장하였다.
- ③ Matza & Sykes에 따르면, 청소년은 비행 과정에서 '책임의 회피', '피해자의 부정', '피해 발생의 부인',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의 호소' 등 5가지 중화기술을 통해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
- ④ Hirshi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사회적 결속은 애착, 참여, 전념, 신념의 4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하위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이며 [사회구조원인](#)에 해당한다.

▣ 사회학적 범죄원인 이론

사회 구조 원인론	아노미(긴장)이론		Merton, Durkheim
	문화갈등이론		Sellin
	문화전파이론		Shaw & McKay
	사회해체이론		Shaw & McKay
	하위문화이론		Cohen, Miller
사회 과정 원인론	사회 학습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Sutherland
		차별적 동일시이론	Glaser
		차별적 강화이론	Burgess & Akers
		중화기술이론	D. Matza, G. M. Sykes
	사회 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T. Hirschi
		견제이론	Reckless
		동조성전념이론	Briar, Piliavin
	낙인이론		Tannenbaum, Lemert

20.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과 관련된 위치정보조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납치·감금·강도, 성폭력 등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다.
- ②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 또는 음성, 문자 등을 타인에게 전송한 자살기도자의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다.
- ③ 112 또는 119를 통해 긴급구조 요청이 접수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위치정보 조회를 실시한다.
- ④ 위치정보조회는 112신고 접수시스템에 연계하여 위치정보 요청 및 정보를 수신한다.

[정답] ③

[해설]

①②④ 옳음. ➡ 아래표 참고.

③ 틀림. 112 또는 119를 통해 긴급구조 요청이 접수된 경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한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권' 검색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권

■ 112 신고접수 시 위치정보 조회

상황 구분	내용	조회가능여부
범죄피해자	납치·감금·강도 성폭력 등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가능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아동(18세미만)	보호자의 보호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로써 현재 보호 상태를 이탈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	가능
자살기도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되거나, 음성, 문자, 등을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가능
조난	자연재해로 인하거나 산중 해상 등 자연적 환경에 적절한 보호수단이 없이 방치되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	가능
단순가출 행방불명·연락두절	보호자의 보호 상태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추정할 특별한 징후를 발견치 못한 경우	추가단서 확보 시 까지 위치정보 조회 곤란

■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경찰청 2019

구분	통신수사	위치정보조회
관련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9조
요건	검사,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2, 119를 통해 긴급구조 요청 접수된 경우
조회대상	대상자가 통신한 기지국 주소	대상자가 현재 위치한 기지국 주소, 또는 GPS 등 위치정보
절차	지방법원, 지원허가, 긴급한 경우(사후허가 가능)	112신고 접수시스템 연계 위치정보 요청 및 정보수신
소요시간	약 30분 내외(FAX 전송등)	수초 이내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상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할 경우 48 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연장된다.
- ②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이 우려되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③)
- ② 옳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①)
- ③ 옳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①)
- ④ 옳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① 제7호)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승진>

- ①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동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연령확인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동법 제13조 제2항)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대법원 2011도3934)
- ② 틀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도15664)
- ③ 옳음. (대법원 2014도5173)
- ④ 옳음.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작·수입·수출, 강, 매, 강, 추**(두문자)에만 있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23.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승진>

- ①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판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의 기본방법 중 제1조건이다.
-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추측 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측은 수사결과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므로, 신뢰성이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여야 한다.
-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관이 한 판단의 진실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그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고 근거의 제시로서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④

[해설]

- ① 틀림. 수사의 기본방법 중 제1조건은 수사자료완전수집의 원칙이다.
- ② 틀림. 추측은 가상적인 판단(가설)이므로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추측을 진실이라고 주장 확신해서는 안 된다.
- ③ 틀림.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검토
- ④ 옳음.

■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①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 ② 수사의 기본방법 중 <u>제1조건</u>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단순히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경험적인 판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u>감식 기타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을 유용하게 이용</u> 해야 한다는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① 추측 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u>합리적인 판단</u> 을 해야 한다는 원칙. ② 추측은 가상적인 판단(가설)이므로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추측을 진실이라고 주장 확신해서는 안 된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	①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②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검토 ③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수사관이 한 판단(주장)의 진실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그 진위가 확인 될 수 있어야 한다. ② 판단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고 근거의 제시로써 객관화 되어야 한다는 원칙.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24. 압수·수색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승진>

- ① 수색한 경우 증거물·물수물이 없으면 수색증명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에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위법하다.
- ③ 피의자를 신문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는 없다.
- ④ 압수·수색영장은 사법경찰리 명의로 검사에게 신청하고, 영장신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옳음.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 ② 틀림.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도10978)
- ③ 틀림. 검사가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①)
- ④ 틀림.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사에게 신청하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 영장신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7조 ①)

25.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승진>

- ①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준속협박’으로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전화번호, ID 등이 포함된다.
- ③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수사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관련 실시간 추적자료, 컴퓨터 통신·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 범인의 발견·확보,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
- ④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의 내용을 지득·채록·유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우편물의 검열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등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 있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② 옳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③)
- ③ 틀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1.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②)
- ④ 옳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26. 다음은 리드(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의 순서이다. A부터 D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직접적 대면 → 신문화제의 전개 → (A) → 반대논리 격파 → (B) → (C)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 (D) → 구두자백의 서면화

- ① A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신문화제 전개를 방해하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억지한다.
- ② B단계는 전(前)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③ C단계는 동정과 이해를 표시하고, 끝까지 피의자를 추궁하여 자백할 것을 촉구한다.
- ④ D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정답] ③

[해설]

- ①②④ 옳음. 아래 표 참고
- ③ 틀림. 6단계는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단계로 사실대로 말할 것을 촉구하며 동정과 이해를 표시한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권' 검색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권

▣ 리드(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9단계 신문방법)

1단계 직접적 대면	수사관이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2단계 신문 화제 의 전개	용의자에게 범행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 사유를 제공하여 비난가능성을 줄여주는 화제 를 언급한다.
3단계 부인 다루기	용의자가 수사관의 신문화제 전개를 방해하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억지한다.
4단계 반대논리 격파	수사관이 주도하는 신문의 화제를 흐리는 용의자의 진술을 압도 한다.
5단계 관심 이끌어내기	4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 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 한다.
6단계 우울한 기분 달래 주기	사실대로 말할 것을 촉구하며 동정과 이해를 표시한다.
7단계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어느 것을 선택해도 혐의가 인정되는 2가지 선택의 질문을 던진다.
8단계 세부 사항 질문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9단계 구두 자백의 서면화	피의자가 진술로 자백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한다.

→ 암기: **대 화 부인 격파 관심 달래 택 세 서 (대화 부인이 격파한다고 관심 달래 택시(세)에서)**

27.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승진>

- ① 적혈구 자체 중량에 의한 혈액 침전현상으로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하는 시체 얼룩과 세포 가운데의 자가효소에 의해 세포구성성분이 분해·변성되는 자가용해는 모두 시체의 초기현상에 해당된다.
- ② 시체얼룩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는 선홍색을 띄고, 청산가리 중독사는 암갈색을 띤다.
- ③ 공기의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도 사이에서 습도는 60~66%일 때 활발히 진행되는 부패와 피부에 대한 수분 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이 습윤성을 잃고 건조해지는 시체의 밀랍화는 모두 시체의 후기현상에 해당된다.
- ④ 총기에 의해 사망한 시체의 경우,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관통총창이 대부분이나, 발사각도 등에 따라 회선총창, 반도총창이 있을 수 있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④

[해설]

- ① 틀림. 자가용해는 시체의 후기현상에 해당한다.
- ② 틀림. 청산가리[cyaan化 Kalium]중독은 선홍색을 띤다.
- ③ 틀림. 피부에 대한 수분 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이 습윤성을 잃고 건조해지는 현상은 시체진조에 대한 설명이고 시체의 초기현상에 해당한다.
- ④ 옳음.

■ 시체얼룩의 색깔

암적갈색	목매사 등 특이사항이 없는 시체
선홍색	역사, 저체온사, 일산화탄소 중독, 청산가리[cyaan化 Kalium]중독
암갈색(황갈색)	염소산칼륨 중독, 아질산소다중독
녹갈색	황화수소가스 중독

■ 총알상처의 분류

관통총상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
맹관총상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있는 경우
찰과총상	탄두가 체표만 찰과 하였을 경우
반도총상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회선총상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 사이를 우회하였을 경우

28. 경비경찰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경비경찰의 종류 중 치안경비란 공안을 해하는 다중범죄 등 집단적인 범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로 사태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경찰을 내용으로 한다.
- ② 경비경찰의 종류 중 혼잡경비란 기념행사·경기대회·경축제례 등에 수반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위적 혼란상태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경찰을 내용으로 한다.
- ③ 경비경찰은 다중범죄, 테러, 경호상 위해나 경찰작전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진압해야 하는 복합기능적인 활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 ④ 경비경찰은 지휘관의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으로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 ② 옳음.
- ③ 틀림. 다중범죄, 테러, 경호상 위해나 경찰작전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 진압해야 한다는 것은 경비경찰의 특징 중 **즉응적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옳음. 경비경찰의 특징 중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

29.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1'승진>

- ① 경비부대를 전면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을 과시하거나 경고하여 범죄실행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경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 ② 경비수단의 원칙 중 '위치의 원칙'은 상대방의 저항력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집중적이고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와 '체포'는 경비사태를 예방·진압하거나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모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 ④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작전시의 변수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병력이나 군중들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①

[해설]

- ① 옳음.
- ② 틀림. 상대방의 저항력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집중적이고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경비수단의 원칙 중 **적시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③ 틀림. 제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하고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근거한다.
- ④ 틀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안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경비수단의 종류

간접적 실력행사	경고	① 경비부대를 전면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을 과시하거나 경고하여 범죄실행의 의사를 포기하도록 하는 간접적 실력행사 이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에 근거 한다. ③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임의처분에 해당 한다. ④ 경고가 임의처분이라도 경찰관의 행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조건으로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직접적 실력행사	제지	① 경비사태를 예방·진압하기 위하여 가하는 직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한다. ②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강제처분 이다. ③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제지와 구별된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다. ⑤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경찰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예) 강제해산, 세력분산, 배제, 통제파괴, 주동자 및 주모자의 격리 등
	체포	①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며 직접적 실력행사 ②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근거한다. 예)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인 체포

➡ 실력행사를 하는데 있어 정해진 순서는 없다. 실력행사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황에 맞게 적절히 행사하면 된다.

■ 경비수단의 원칙

균형의 원칙	경비사태의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경력운용을 균형있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위치의 원칙	실력행사를 할 경우에는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정과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적시의 원칙	상대방의 기세와 힘이 미처 살아나지 못할 때나 힘이 빠져서 저항력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실력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
안전의 원칙	경비사태 발생시 경비병력이나 군중들을 사고없이 안전하게 진압해야 한다는 원칙(가장 중요)

30.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포함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 ④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권'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권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 ② 옳음.
- ③ 틀림.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 ④ 옳음.

▣ 정의 (제2조)

비상상황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지휘선상 위치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 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 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착근무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 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필수요원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 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일반요원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 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가용경력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 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작전준비태세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1. 다음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과 명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1'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경비지역으로,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을 설치, 돌발사태를 대비한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가 필요하다. ㉡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출입자 통제관리, MD 설치 운용, 비표 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필요하다. ㉢ 조기경비지역으로, 감시조 운용,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이 필요하다.
--

- ① ㉠ 안전구역 ㉡ 경비구역 ㉢ 경계구역
- ② ㉠ 경비구역 ㉡ 경계구역 ㉢ 안전구역
- ③ ㉠ 경비구역 ㉡ 안전구역 ㉢ 경계구역
- ④ ㉠ 경계구역 ㉡ 안전구역 ㉢ 경비구역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③

[해설]

- ㉠ 주경비지역으로,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을 설치, 돌발사태를 대비한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가 필요하다. - 경비구역
- ㉡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출입자 통제관리, MD 설치 운용, 비표 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필요하다. - 안전구역
- ㉢ 조기경보지역으로, 감시조 운용,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이 필요하다. - 경계구역

■ 행사장경호

제1선(안전구역-내부)	제2선(경비구역-내곽)	제3선(경계구역-외곽)
절대안전 확보구역	주경비지역	조기경보지역
① 피경호자가 위치하는 내부로서 옥내 일 경우에는 건물 자체 를 말하며, 옥외 일 경우에는 본부석 이 통상적으로 해당됨 ②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을 의미함	제1선을 제외한 행사장 중심으로 소총 유효사거리 내외의 취약개소를 의미함	① 행사장 중심으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보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설정된 선 ② 주변 동향파악과 직시고층건물 및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함
경호에 대한 주관 및 책임은 경호실이고 경찰은 경호실 요청한 때 경력 및 장비를 지원함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 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을 짐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짐
-MD설치 운용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 -출입자 통제관리	-돌발사태 대비 예비대 및 비상통로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 설치 -구급차, 소방차 대기	-도보 등 원거리 기동 순찰조 운영 - 감시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 , 차단

32.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학과시험 응시 전 받아야 하는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으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제외된다.
- ②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은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 ③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권장교육 대상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중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도로교통법 제73조 ① / 동법 시행령 제37조 ①)
- ② 옳음. (도로교통법 제73조 ② 제4호)
- ③ 옳음. (도로교통법 제73조 ③ 제4호)
- ④ 틀림.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정기 교통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이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의2 ②)

3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 ② 무면허인테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면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도로교통법 제44조 ②)
- ② 틀림.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 바, **무면허인테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와 제109조 제2호, 제41조 제1항(주취중 운전금지)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 하는 것이니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6도2731)
- ③ 옳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태도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도6632)
- ④ 옳음. “운전”이란 도로[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제148조(벌칙)·제148조의2(벌칙) 및 제156조제10호(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34.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승진>

- 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
- ② 음주측정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흉골골절 등으로 인한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어 이십여차례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여러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행위는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⑤ 제3호)
- ② 옳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②)
- ③ 옳음. (대법원 2005도 7125)
- ④ 틀림.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99도5210)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승진>

-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시위’에 해당하려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용산철거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한다.
-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순수한 1인 시위는 동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집회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수에 대해 종래의 학계와 실무에서는 2인설과 3인설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인이 모인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집시법상의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②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0 헌가2)
- ② 옳음. (대법원 2011도6301)
- ③ 옳음.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옳음.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수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2010도11381)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제한·금지·보완통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으며, 제한 통고의 경우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④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SMS)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⑤)
- ②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 ③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 ④ 틀림.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1'승진>

-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②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5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구호물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④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② 틀림.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제4호) - 삭제예정[시행일 : 2021. 6. 9.]
- ③ 틀림.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④ 틀림.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38. 다음 비밀공작의 순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승진>

지령 → 계획 → 모집 → 훈련 → 브리핑 → 파견 및 귀환 → 디브리핑 → 보고서 작성 → 해고

- ① ‘모집’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시키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과정이다.
- ② ‘브리핑’은 공작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상황과 임무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하는 단계로, 공작원에게 공작수행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이 이루어진다.
- ③ ‘파견 및 귀환’은 공작계획에 따라 공작을 진행할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이다.
- ④ ‘보고서 작성’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정답] ②

[해설]

- ① 틀림. 훈련에 대한 설명.
- ② 옳음.
- ③ 틀림. 모집에 대한 설명.
- ④ 틀림. 계획에 대한 설명

【경찰실무종합】 21' 정기승진시험 해설

NAVER cafe : 네이버에서 '정진천'검색

해설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공작과정

지령	상부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공작을 시작
계획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조직화 하는 과정.
모집	공작계획에 따라 공작을 진행할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
훈련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시키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과정.
브리핑	공작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상황과 임무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하는 단계로, 공작원에게 공작수행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이 이루어진다.
파견 및 귀환	공작원을 공작대상 지역에 파견하고, 공작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
디브리핑	공작원이 귀환하면 즉시 디브리핑이 시작되며, 공작원이 체험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발표하게 하는 단계
보고서 작성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해고	공작순환의 최종 단계로 공작임무가 종결되거나 공작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공작원을 해고

39. 범죄인 인도에 관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승진>

- ①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제 9조는 절대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③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인만 인도한다는 원칙이다.
- ④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인도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
- ② 옳음. 범죄인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여 쌍방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다.(범죄인인도법 제6조)
- ③ 옳음. (범죄인인도법 제6조)
- ④ 옳음. (범죄인인도법 제10조)

